월/요/광/장

임우진

지방공기업에서 정치를 빼자

6·2 지방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는 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취임 준비가 한창이다. 당선이 확정되면서부터 단체장의 직무는 사실상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가운데 전국의 많은 단체장 당선자들이 공사·공단 등 지자체 산하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조직진단, 감사, 평가를 통하여 업무를 점검한 후 구조를 조정하고 경영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재 지방공사·공단 등 698개의 산하기관이 있다. 이 기관들의 예산은 144조 원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과 맞먹는 규모이다. 이러한 산하기관들은 공공서비스 공급과 주민복지증진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산하기관들은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한다. 전국 125개 지방공사·공단 중에서 30개 기업이 적자(08 결산)를 시현하였고 부채규모도 32조원에 이른다. 감사 때마다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고, 서비스만족도도 평균 75.1점(09년)으로 낮은 편이다.

왜 이처럼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주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실한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자율 책임경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공기업의 설립, 인사, 경영에 기업논리가 아닌 정치적 요소가 개재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는 그 기관의 설립, 운영, 특히 인사에 있어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기업경영 논리가 지배하도록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먼저, 공기업 등은 설립단계에서부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기업 설립권이 지자체에 이양된 후,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정치적 이유로 또는 위인설관 차원에서 설립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통·폐합 대상이 된 경우가 있다. 금년에도 행정안전부는 경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1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다.

다음으로 산하기관 경영도 인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능력이 부족한 비전문인을 청탁, 선거공로, 사적인연 등 정치적 비합리적 논리에 따라 임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에 수도권의 한 기초공기업 책임자는 소속직원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들어온 직원들이어서 직원통솔이 어렵다는 고충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인사에 정치논리가 작용하는 한 지방공기업 등은 부실을 면할 수 없다. 관료, 정치인 등 출신보다는 도덕성, 책임성 등 자질, 경영능력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한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형식적인 공모는 이제 그만두어야한다. 구성원들의 공감 받는지 못하는 정치적 인사는 단체장의 선거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산하기관 경영만 저해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산하기관의 경영과정에 간섭하고, 심지어는 부당한 청탁과 요구를 하는 등 자율적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도 있다. 단체장의 자치경영방침은 존중하되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자율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여야한다. 경영권은 보장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영과정의 비리,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실적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속지자체, 감사원 감사 등 통제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현재 매년 경영평가와 격년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더욱 정밀한 평가점검시스템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공기업 임·직원들의 정치활동을 철저히 규제하여야 한다. 우리 지방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공직자들이 선거과정에 줄을 서고 또한 줄을 세우는 풍토라고 할 수 있다. 임·직원들의 정치운동은 공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단체장이 바뀌면 물갈이 논란을 불러오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산하기관에 개입될 수 있는 정치적, 타율적, 비합리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 합리적으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자체 산하기관 운영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제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지방자치도 선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심화되어가는 산하기관 임직원의 정치적 교체의 악순환이 어느 한 순간에 완전히 단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도적 단계에서는 획일적인 교체를 지양하고, 자질과 능력,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공감 받는 수준에서 신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후임자는 앞서의 인사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전문인이라야 정치적 논란이 없을 것이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박종민

공판검사의 법정 소회

필자는 광주지검 공판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판검사다. 공판검사란 표현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공판검사는 주로 법정에서 공판관여를 하는 일이 주업무인데, 필자가 공판검사로서 노력하고자 하는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법정에서 '피해자 보호'는 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가 증인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적지 않은 금액의 사기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들 대다수가 피고인과 지인이었는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공판검사인 필자를 찾아와 피해 내용은 물론, 인간적인 배신감을 호소하였다.

그는 "피고인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피해진술을 원하기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피고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설득하는 자료가 되었다.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경우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친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8세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부인은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라는 형사소송절차상의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피해자가 처참했던 순간을 되살려 다시 피고인 앞에서 증언해야 하는, 이른바 '성폭력 2차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검찰은 이러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서 위 영상녹화물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피고인 대면 없이 피해자가 증언할 수 있도록 비디오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방식도 마련되어 있다. 필자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디오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신청하고 있고, 실제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범에 있어서는 비디오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방식이 정착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에 별도로 마련된 비디오중계실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아니한 채 어머니 등 믿을 만한 사람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해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에서도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역시 이 신문방식을 통하여 편안한 가운데서 진술을 할 수 있었다.

최근 수년간 피의자·피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의 노력 결과 법정에서는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다. 이는 필자만의 견해는 아닐 것이다. 이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 마련에도 힘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광주지검 검사〉

기고

김성

'나눔'이 5·18의 '미래가치'다

5·18 30주년 기념행사들에 대한 정리와 향후 과제도출 작업이 천안함과 6·2 지방선거, 월드컵 열풍에 슬그머니 지나가고 말았다. 5·18의 가치는 1980년의 10일간 못지않게 그 후 2000년까지 20년간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온 국민이 피 흘려온 과정에 있다. 마치 프랑스대혁명이 오랜 시간 다듬어지면서 민주주의를 확산시킨 것처럼.

역사에서는 30년을 한 세대로 친다. 30주년은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사고(思考)를 가진 세대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30주년 기념식인데 올해는 무언가 허전했다. 단적인 예가 어처구니없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빠진 것을 들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야 먼저 타계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현 대통령은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도 보이지 않아 씁쓸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가면서 변화해 갈 것이다.

30주년을 맞은 올해도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 그 행사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했다. 필자가 5·18 기념재단 기획위원장으로 20주년 행사에 참여했을 때의 현실적인 목표는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의 첫 참석, 행사의 국비지원, 학술활동 활성화, 전국화·국제화를 위한 5개 국어 비디오 제작 등이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세 가지는 해결됐지만, 5개 국어 비디오 제작은 성사 일보직전에 무산돼 오늘날까지도 과제로 남아있다.

올해 열린 제 11회 광주인권상 시상식, 광주아시아포럼, 5월창작가요제, 뮤지컬 '화려한 휴가' 가운데 '광주인권상'은 이미 국제적으로 권위를 받고 있고, 뮤지컬 '화려한 휴가'도 광주와 서울 공연에 이어 지방 순회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또 하나 눈길을 끈 것은 지난 5월 30일 금남로에서 열린 '광주시민 아름다운 나눔의 날' 행사였다. 아름다운 가게 등이 주관한 이 벼룩시장에 전남대병원과 광주시내 초·중고생, 봉사단체, 다문화가정 단체 등이 참여했는데 2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생활용품 판매, 물물교환 등으로 거두어진 수익금은 모두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사업비로 기탁됐다. 5·18정신 중 하나가 '나눔정신'이다. 극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10일 동안 일치단결해 치안을 유지하고, 먹을 것을 나누면서 나온 정신이다. 5·18 기념행사도 '투쟁'에서 '계승'으로, 다시 '나눔'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감안할 때 민주·인권·평화라는 5·18의 가치가 지속되는 실천적 행사는 바로 이 '나눔장터'라고 생각된다. 100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될 수 있는 것 역시 바로 '나눔정신'이 깔린 '나눔장터'가 아닐까.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해마다 찾아오는 5·18 주간에 전국의 각 도시에서 '나눔 장터'를 열 것을 제안해 본다. 그렇게 되면 전 국민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30년 동안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 온 동시대 국민도 족쇄를 풀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전 국민이 5·18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지 기념식과 참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지역활성화연구소장〉

'관광한국' 성공하려면 안전불감증 개선해 나가야

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영어 학원 참관 수업이 끝난 뒤 원어민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어려운 점은 없느냐고 물어보자 선생님은 놀랍게도 'unsafe'라는 단어를 썼다. 우리의 안전 불감증과 사회 곳곳에서 겪는 불합리한 사고방식에 대한 놀라움을 말씀하시는 거였다.

캐나다에서 들어와 비행기가 멈춰 서는 순간부터 놀랬다고 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춰 서기도 전에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승용차 안에서 운전 중에도 계속 DMB를 켜고 TV를 보더라고 했다. TV를 보는 운전자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른다며 웃었다.

말로만 관광 한국, 선진 한국을 외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김아현·광주시 북구 연제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사설

아쉬운 '8강 좌절'…월드컵 도전 이제부터다

월드컵 '8강 도전'이 아쉽게도 좌절됐다. 사상 첫 원정 16강의 꿈을 이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6일 남아공 월드컵 8강 도전에 나섰으나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에 경기를 주도하고도 1대2로 석패했다. 하지만, 태극전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넘치는 자신감과 투지로 정말 잘 싸운 한 판이었다. 23인의 태극전사와 허정무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남아공 월드컵은 한국 축구사에 한 획을 그은 대회였다. 온 국민이 염원했던 '원정 첫 16강 진출'이란 꿈이 달성됐고, 더욱이 그 꿈이 토종 감독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진도 출신의 허 감독이 토종감독의 '월드컵 첫 승'과 '16강 진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지역민들의 기쁨과 자긍심은 더욱 컸다.

남아공 월드컵은 또한 한국 축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세계 축구의 변방에서 어느새 중심부에 진입하고 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남아공 월드컵에서의 한국축구는 확실히 예전과 달랐다. 태극전사들의 개별 기량은 정상급 선수들에 전혀 뒤지지 않았고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강호들과의 대결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두꺼워진 선수층과 세계화에다 국민의 성원이 토양이 돼 이젠 '아시아 축구의 맹주'를 뛰어넘어 명실상부한 '세계 16강'을 자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한국축구가 미래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허 감독도 지적했듯이 세계 수준의 수비수 양성이 시급하다. K리그 활성화를 통한 저변확대도 필수적이다. 좀 더 많은 선수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월드컵 도전은 여기서 결코 멈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상 첫 '월드컵 원정 16강'이란 위업을 달성하고 국민을 즐겁게 해준 선수단에 다시 한번 격려를 보낸다.

'기업구조조정'지역경제 파장 최소화해야

건설과 조선·해운업종의 총 65개 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퇴출절차를 밟게 됐다. 우리은행을 포함한 6개 채권은행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1985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결과 이 같은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했다. 또 상호저축은행 63곳이 안고 있는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 매입을 위해 공적자금 3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과다하게 늘렸다가 부실만 키움으로써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린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을 기업 경쟁력 강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빠른 시일 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들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광주·전남지역도 기업구조조정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역의 중견 건설기업과 계열사들이 이번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했으며 전남지역 강관제조회사 한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건설사들의 잇따른 붕괴로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사 부실은 건설경기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관련업계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대량 실업, 소비 위축, 지역금융 부실화 등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가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휴자산 매각 등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나 채권단이 지역 건설 경기 회생을 위해 세제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광주·전남지역이 기업구조조정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대비에 나서야 한다.

無等鼓

집시법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한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거리응원을 펼친 지난주 국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하고 야당은 실력 저지에 나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문제의 조항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집시법 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여당은 야간에 평온한 휴식을 취할 행복추구권을 내세워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불허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면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될 수 있고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개정안을 '촛불집회 금지법'으로 규정해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신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주변에서만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물론 야간에 집회가 열리면 교통혼란과 소음, 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규정해 놓고 있다. 집시법 5조(폭력이 예상되는 집회·시위 금지), 8조(사생활의 평온), 12조(교통소통), 14조(확성기 사용 제한) 등이 그것이다.

법조계에선 개정안에 시간대를 정해 옥외집회를 금지할 경우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견해가 많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특정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다.

한나라당은 집회 때 마스크 사용을 금지하는 기상천외한 법안을 내놓았다가 반발이 심해지자 슬그머니 철회한 바 있다. 폭력시위는 사라져야 마땅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오남용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